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9. 26

다. 상 정 일 자 : 2001. 9. 26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 조례 부칙에서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조례 22조제1항제4호와 제28조제2항의 정비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 규정이 상호 상충되어 운영하였던 내용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공시설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함.
(안 제5조 제2항·제4항 관련)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 (안 제23조)
 - 대부료·사용료 부과 일반적 적용 : 1000분의 50 → 1000분의 50이상
 - 도시계획저축·공무원후생복지재산 : 1000분의 40 → 1000분의 40이상
 - 공용·공공용·취락개선사업용재산 : 1000분의 25 → 1000분의 25이상
 -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준공인가필) : 1000분의 25 → 1000분의 25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0분의 10 → 1000분의 10이상

-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1000분의 10 → 1000분의 10이상
-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부료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 상으로 규정(안 제23조 제10항)
 -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때
 -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우리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때
- 영 제100조의3제2항의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함(안 제25조의2)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은것보다 군에 유리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재산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건물,구조물이 있는 재산
 - 전세금의 산출 기준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있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부과사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토록 함(안 제2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2000. 10. 20)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또는 조정하였으며 생활 보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등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자구 및 조문을 정리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특히, 공유재산의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 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시 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도 간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도 기할수 있을 것임.
-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됨.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안대로 준용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1 .7

제 출 자 : 화순군수

1. 제안 이유

조례 부칙에서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조례22조 제1항 제4호와 제28조제2항의 정비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규정이 상호 상충되어 운영하였던 내용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공공시설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제4항 관련)

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 (안제23조)

- 대부료·사용료 부과 일반적 적용 : 1000분의 50 → 1000분의 50 이상
- 도시계획저축·공무원후생복지재산 : 1000분의 40 → 1000분의 40 이상
- 공용·공공용·취락개선사업용 재산: 1000분의 25 → 1000분의 25 이상
-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준공인가필): 1000분의 25 → 1000분의 25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0분의 10 → 1000분의 10 이상
-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10 → 1000분의 10

이상

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부료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안 제23조제10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때

-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우리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라. 영 제100조의3제2항의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함. (안 제25조의 2)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재산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건물·구조물이 있는 재산

- 전세금의 산출 기준은 정보통신부의 1년 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마.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있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부과사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토록함 (안 제28조의 2)

3.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개정 표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중 조의 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본문과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7.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때

2. 우리 군 지역에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

상을 우리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 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p> <p>⑤(생략)</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현행과 같음)</p>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삭제 '99. 11. 19></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p> <p>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p> <p>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④(생략)</p>	<p>제11조(관리및처분)</p> <p>-----</p> <p>-----</p> <p>-----</p> <p>-----</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생략)</p>	<p>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p> <p>①행정재산·보존재산</p> <p>-----</p> <p>-----</p> <p>②행정재산·보존재산</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삭제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용허가 기간)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삭제(94. 7. 21)</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 하여야 한다.</p>
<p>제14조 (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생략) 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p>제14조 (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p>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5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u> 5. (현행과 같음) 6. <u>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u>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u>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u> 	<p>제22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①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삭제>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①(생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생략)</p>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삭제></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p> <p>-----외국인투</p> <p>-----사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p> <p>-----용·수익허가하는경우의대부료-----</p> <p>-----</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u> <u>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u> <u>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u> 1. ~ 6.(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3조</u> <u>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u> <u>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u> 1. ~ 6.(현행과 같음) <u>②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u> <u>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u> <u>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u> <u>여 산출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u> <u>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u> <u>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u> <u>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u> <u>한다</u></p> <p><u>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 사용·수익</u> <u>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u> <u>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u> <u>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u> <u>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u> <u>야 한다.</u>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 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 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 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전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삭 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 ----- -----</p> <p>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 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8조의2(변상금의 정분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p> <p>① ~ ②(생략)</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④(생략)</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p> <p>(하천법제33조)----- ----- ----- ----- ----- -----</p> <p>1. ~ 3.(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 2.(현행과 같음)</p>

